

5차 핵실험, 김정은 장기집권 전략에 따른 행보

Online Series

2016. 09.13. | CO 16-25

박영자(북한연구실장)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김정일이 병상에서 돌아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본격화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정치가 고도화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핵과 과학기술을 ‘만능의 보검’으로 삼아 대내외 정책 모두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5차 핵실험의 북한측 의도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가능하다. 가장 큰 요인은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여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권 공고화 요인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기술적 준비가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핵·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5차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본다.

‘핵무기 병기화’로 김정은 장기집권의 군사안보적 기반구축 선포

5차 북핵실험이 이전과 다른 점은 ‘핵탄두 폭발실험’이라는 기술 진전이다. 핵탄두 폭발실험은 소형 핵탄두를 만들어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실험이다. 9월 9일 발표한 북한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에 따르면,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한 실험이다. 북한측의 성공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기 병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체계’ 3대 구성요소는 핵물질, 운반수단, 기폭장치이다. 핵무기의 원료인 핵물질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2010년 이후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우라늄탄 1기 제조에 고농축우라늄 20kg 내외 소요)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영변 원자로를 통해 현재 30~40kg의 플루토늄도 보유(핵무기 1기 생산에 플루토늄 4kg 내외 소요)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반수단은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미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 진전도 이룬 상태다.

마지막은 소형화된 기폭장치이다.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가능하려면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600kg 정도로 소형화해서 미사일 탄두부에 탑재해야 한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되었으나 그 정도로 진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스커드 770~1000kg, 노동 700kg, 무수단 650kg 등이기 때문임을 그 근거로 한다. 이에 비해 북한은 금번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가 표준화·규격화됨으로써 소형화·경량화·다중화된 각종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핵무기 병기화’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핵무기 체계 구축의 3대 요소 중 기폭장치 완성도 관련해서는 의견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물질과 운반수단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실전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 병기화’를 과시하고 있다. 금번 5차 핵실험은 이 기술적 진화를 입증함으로써 군사안보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의 장기집권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알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SLBM 발사 성공 후 2020년 기점 중기(中期) 국가전략 가동

국가전략 차원에서 5차 핵실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후 북한 행보에 기초한 김정은 시대 단계별 전략을 추론해보자. 김정은 집권 5년 이내(2012~16년) 단기 전략은 핵·미사일 기술 및 군사력을 발전시키며 대내외 환경을 김정은 권력 공고화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2020년 기점 중기 전략은(목시적으로라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체결, 경제제재 완화, 국제사회의 외자유치와 대북지원 유도이다. 마지막으로 2030년을 기점으로 한 장기(2015~30년) 전략이다. 김정은은 이 시기 경제·핵무력·과학기술 발전을 모두 갖춘 소위 ‘문명국가’의 최고지도자로 자리 잡고,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등으로 김일성·김정일 보다 더 위대한 수령으로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이 공식 집권한 후 단기 5년 전략 실행 과정에서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과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수행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9월 5일 기술 진전된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성공시켰다. 김정은 정권은 이 기세를 몰아 5차 핵실험으로 집권 5년 이내 성과를 과시하면서 집권 10년을 바라보는 중기 전략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안보 측면에서 보면 주일미군의 동북해 쪽으로의 전진과 사드 배치가 본격화될 2017년을 기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비 목적도 있다.

국제적 ‘대북제재-북핵불용’ 연대 흐름에 맞대응

5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는 중국 항저우에서 9월 4~5일 개최한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북핵불용’으로 연대하려는 흐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라고 발표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공식 명분이다. 더불어 남중국해 문제 뿐 아니라 중일 갈등의 핵심 이슈인 동중국해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 문제 등으로 국제적 지지가 필요한 중국에 대한 ‘공세적 견인’ 의도도 보인다.

대북제재의 비실효성 과시 및 차기 미 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추동

최근 북한의 대외매체들은 대북제재가 ‘북한체제의 힘’을 더욱 키운다고 선전한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핵·미사일 기술 발전 뿐 아니라 ‘식량의 자급자족률 상승, 원료·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 경제분야 국산화 실현’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번 5차 핵실험은 대북제재의 비실효성을 과시하며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연동되어 올해 11월 8일 미국대선에 맞추어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보인다. 2009년 5월 2차 북핵실험, 2013년 2월 3차 북핵실험 역시 미국 행정부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있었다. 현재 미국 내 매과 진영에서도 대북제재 효과에 의문을 던지며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흐름을 활용하여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이다.

전체적으로 금번 5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이 3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향한 군사안보적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선언한 의미가 가장 크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에 따라 기술적 준비가 갖추어지면 언제든 핵·미사일 발사 시험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및 군사력 발전 수준을 과시하며 동북아 갈등 및 남남 갈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시대 중기(中期) 전략 목표로 추정되는 ‘(묵시적으로라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그와 연동된 대외관계 개선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